

[ 종합 ]

# 전남무역 中國기지 ‘부실 운영’

## 땅 임대료 분쟁에 대표 횡령 시비도 양란 수출농가 3년간 25억 피해 발생

전남도가 지역 농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전남무역이 양란 수출을 위해 중국에 수출전진기지를 마련했지만 중국 측과 임대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면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무역은 중국 측과 임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결제하는 바람에 전직 현지법인 대표가 횡령 시비에 휩싸이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과적으로 전남지역 양란 수출농가에 피해를 초

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전남무역과 전남지역 양란 재배농민들에 따르면 전남무역은 양란 ‘심비디움’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중국 대전에 수출전진기지를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004년 3월 중국 ‘장청 농업발전유한공사’를 상대로 10년간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3억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나 당시 3억5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던 중국 측이 최근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분쟁이 빚어졌다.

전남무역 측은 당시 현지법인 대표였던 A씨를 통해 3억5천만 원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당시 중국 측은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민들의 재배단지 이용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전남무역측은 지난 2005년 1월 A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2006년 6월 공공행정 혐의로 검찰에 추가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중국 측과 전남무역, 재배농민 사이에 분쟁이 되풀이되면서 중국 현지 양란 심비디움 재배단지 조성은 물론 수출 자체에 차질을 빚었다.

전남도의회 이기병 의원(민주·나주1)과 재배농민 대표들은 이날 전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무역 중국대련 수출전진기지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2004년도 1차 분 수출대금 8천600만 원을 비롯해 3년 동안 8 농가에서 25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배농민들은 “전남무역과 전남도가 문제를 파악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농민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전남무역 측은 “당시 정식 회계무트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임대비용이 건네진 것으로 확인돼 관계직원의 횡령혐의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농민들이 상품성 없는 양란 심비디움을 납품하면서 근본적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유기농 농산물 생산 ‘학사농장’ 서구 마죽동에 ‘종합타운’ 개장

#### 연건평 300평 전문식당·판매장 갖춰

유기농 농산물 생산·유통업체인 학사농장(대표 강웅·장성근 남면)이 28일 유기농 전문식당과 상품 판매장을 갖춘 종합타운 ‘학사농장’(서구 마죽동 삼무지구)을 개장했다.

연건평 300평 규모의 ‘학사농장’은 1층 유기농 전시판매장, 2층 유기농 전문식당, 3층 세미나실과 소비자 교육장 외에 차량 60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1층 유기농 전시판매장에는 유기축산농업법인, 허브 및 아로마 재배농민 등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과 쌀·과일 등 유기농 과채를 전시·판매한다.

또 2층 전문식당은 유기농 식품을 재료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며, 3층은 유기농 등 친환경교육을 위한 소중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강웅(40) 학사농장 대표는 “도시와 농촌이 하나되는 공간을 도심에 만들어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함께 ‘도농상생’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2년 설립된 학사농장은 장성의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상추·청경채·케일 등 50여 가지의 농산물을 생산, 판매해 ‘유기농 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공동체다.

/이태재기자 jitee@kwangju.co.kr



총리의 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한명숙 총리가 26일 새벽(한국시간) 티슈켄트 시내 숙소호텔에서 열린 총리 주최 민찬에 참석, 현지음악에 맞춰 사바르트 미르자요예프 총리와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 5·18‘아람회’사건 26년만에 재조명

### 법원, 재심 개시결정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탄압 실상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권의 5·18 진압 사태 등을 소개하는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은 박해진(51), 황보윤식(57), 정해숙(72)씨와 고(故) 이재권씨의 사건을 재심한다는 결정을 지난 7월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 등 4명의 기소 당시 범죄사실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진행되던 때 이를 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 었던 만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사유 등에 관한 특별법 상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 혈세로 살려온 금융공기업 회장·임직원 급여 등 ‘평평’

### 감사원, 韓銀 등 12곳 실태조사

공적자금이 투입돼 되살아난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연봉이 12억원이 넘는 등 국책금융기관과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의 급여가 시중의 민간은행보다 훨씬 높은 등 국책은행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이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4면>

또 이들 금융공기업들은 일하지도 않은 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해 성과급을 기준보다 많이 주고, 각자가 불입해야 할 개인연금저축을 기본급에 편입시키거나 하면, 행우회 출자회사와의 수익계약으로 편법적인 복리후생 재원을 마련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한국은행 등 12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2004년도 평균 연봉이 6억3천600만원으로, 업종이 다르지만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 평균 보수 1억5천700만원의 4.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연봉이 12억6천만원, 광주은행장 연봉이 4억9천6백만원에 달하는 등 4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기관장 평균 보수는 6억7천2백만원이었다.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1인당 연봉이 4억여 원인 시중은행의 78%에 불과한 데도 직원 인건비는 시중은행보다 13%나 많은 7천717만원에 달했다.

또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직원에게도 중간 등 급으로 상향 조정해 성과급을 10억원 초과 지급했고, 특히 우리은행은 휴직자 등 근무하지 않은 직원 42명에게도 성과급 7천200만원을 지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조영환 인권위원장 사표

조영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배대섭 인권위 혁신인사팀장과 외부에서 만나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내도록 했고, 배 팀장은 사직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조 위원장은 또 27일부터 최영애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공식 서류를 작성해 인사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지역 66만평 무단 도로편입

### “정부·지자체 보상 한푼없이 개인 땅 사용”

전남지역에서 무려 220만㎡(66만5천500평)의 개인 토지가 정부와 지자체의 보상없이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 토지 소유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런 보상없이 개

인 땅을 무단 점유, 도로로 편입해 사용하는 땅은 880만㎡(266만평)으로 집계돼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

르면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런 보상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하는 민간 토지(미분양지)는 전국적으로 880만㎡에 이르며, 이를 2007년부터 5년간 분할 보상한다면 총 2조4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880만㎡의 미분양지가 운대 전남이 전체의 28%에 달하는 220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다음으로 제주도 176만6,737㎡, 강원도 117만2,138㎡ 순으로 나타났

다. 또한 광주시의 경우 6만3,782㎡(1만9천300평)이 미분양지로 집계됐다. 미분양지 보상은 지난 97년 이전에는 20년 이상된 도로부지의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어 국가소유권이 인정되었지만, 97년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국가의 강제적인 취득의 경우 취득시효가 불인정되어 부당이득금과 추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보상 계획을 세워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공부도 못하면서 책가방만 큰 끝

### 세계 명품 화장품 중금속 검출

크리스틴 디올 등 4개사

세계 4대 화장품인 크리스틴 디올, 에스티로더, 크리니크, 람콤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홍콩 유선방송이 최근 홍콩 표준검정센터에 위탁, 4대 명품 메이크업의 6개 콤팩트 파우더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크리스틴 디올과 에스티로더 제품의 크롬 함유량은 1kg당 각각 4.5mg 과 3.9mg이 검출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최근 중금속 파문을 일으킨 SK-II 콤팩트 파우더보다 많은 검출량이다.

또 크리니크와 람콤에서도 또 다른 중금속 물질인 네오디뮴이 1kg당 1.8mg과 1.6mg씩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정한 기준(1kg당 1mg)을 초과한 양이다.

이들 회사 모두 화장품 생산과 정제에 크롬과 네오디뮴을 첨가한 사실을 부인했다.

/홍콩=연합뉴스

##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일 공고

공고 제2006-36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선거인(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은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선거명 :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
  - 나. 선거일시 : 2006. 10. 2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다. 투표장소 :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는 장소 (추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안내문 참조)
- 교육감선거의 결선투표사유가 발생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 가. 결선투표 실시사유
    - 1) 유효투표의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때
    - 2)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
  - 나. 결선투표일시 : 2006. 10. 25.(수)
  - 다. 결선투표장소 : 원선거일 투표장소와 동일함
- 교육감선거의 결선투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2006년 10월 24일자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에 결선투표실시여부를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7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운영안내 ◆

바르고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거법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제보바랍니다.

▣ 주요 신고·제보대상

- 금품제공을 통한 선거인 매수행위
-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또는 이를 요구·수령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후보자와 그 가족에 관하여 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
- 전화·방문·선전물 등을 통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위반행위제보 : (062)382-4773, 5384, 1588-3939  
gj.election.go.kr